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Olli Kangas (핀란드 사회보험기구(Kela) 정부관계국장)

■ 기본소득 실험의 이유

기본소득 실험은 2015년 5월 29일 취임한 유하 시필레(Juha Sipilä) 핀란드 총리의 중도우파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다. 기본소득 실험은 2017~2018년에 시행되며, 2019년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실험은 핀란드 사회보장제도를 근로생활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며, 근로의욕 저해 요소들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개선하며, 지나치게 복잡한 급여제도를 간소화하는 데 목표를 둔 정책이다.

이 실험을 통해, 핀란드 정부는 현재 핀란드 소득보장제도의 커다란 문제점인 소득 및 관료주의의 함정과 함께, 근로의욕 저해 요소들을 줄이거나 가능하다면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 급여(노동시장 지원금, 주거수당, 사회부조 등)는 여러 건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복수의 급여가 함께 지급되면 매우 높은 유효한계세율(80~100%)이 적용되며, 취업이 금전적으로 반드시 이득이 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 게다가 사회보장급여(특히, 실업급여)의 수혜자는 '관료주의의 함정'(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수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노동시장 지위 변경 시 또는 소득이전 제도 변경 시

* 이 글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예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서는 <https://helda.helsinki.fi/bitstream/handle/10138/167728/WorkingPapers106.pdf?sequence=4>에서 볼 수 있다.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짐)을 우려하기 때문에, 단기 일자리를 수락하는 데 있어 조심스럽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와 단기 고용을 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함께, 디지털화 및 플랫폼 경제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영시간 고용계약,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 불안정 고용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는 사회정책 기제로서 기본소득의 행동효과(behavioral effect)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기본소득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들이 있지만,¹⁾ 실제적으로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우리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험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상당히 간단한 일처럼 보이는 기본소득 실험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국내법 및 유럽연합(EU) 차원의 법규를 포괄하는 법률적 차원에서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 즉 필자가 팀장으로 이끌었던 연구진은 훌륭한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결국에는 법률적, 재정적 현실에 직면하고야 말았다. 하지만 현재 핀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은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점도 갖추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결과도 얻은 바가 없다. 우리는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이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개입이든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참여자들의 등록 자료를 사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년간의 실험이 끝날 즈음인 2018년 하반기에 일부 면담과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 Guy Standing의 여러 저서, Philippe van Parijs & Yannick Vanderborght(2017), *Basic income*, Cambridge: Harvard U.P.; Robert van der Veen & Loek Groot(eds.)(2000), *Basic Income on the Agenda* 참조. Amsterdam: Amsterdam U.P는 기본소득을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에, 예를 들어, Hilmar Schneider(2017)는 자신의 논문인 “Universal Basic Income – Empty Dreams of Paradise” (Intereconomics Volume 52, March/April 2017, Number 2)에서 그러한 주장을 전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 실험을 위한 모델 탐색

핀란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소득 모델은 없었다.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실험은 사회정책 및 제도적으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실시된 것이었고, 어떤 제도적 환경에서 실시된 실험의 결과가 다른 환경에서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한가에는 분명 이러한 정책 및 제도적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사회보장 수준,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사회제도 및 세제에 있어서도, 1960년대, 1970년대 및 1980년대 (인도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이고) 미국의 상황은 2010년대 후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서 실시된 실험들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계획 수립에 어느 정도 안내자의 역할을 하였다. 핀란드 정부는 실험 계획 수립의 기초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였다.

- ① 완전 기본소득 모델(full basic income model): 소득 또는 사회적 지위, 상황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이 지급액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대부분을 대체하는 모델
- ② 기본소득 모델(basic income model): 일정한 사회보장급여와 소득비례급여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모델
- ③ 네거티브 소득세 모델(negative income tax model)
- ④ 참여적 기본소득(participatory basic income) 등의 기타 기본소득 모델

광범위한 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을 활용하여 여러 기본소득 모델이 근로의욕, 빈곤 및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은 200쪽이 넘는 분량으로, 균형예산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모델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기본소득의 수준, 세금의 수준과 유형(누진세 또는 정률세), 사회보험 기반 급여도 근로의욕 측정 시 지표로 사용되는 유효한계세율과 노동시장 참여세율(participation tax rate)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월 450, 550, 650, 750유로(부분 기본소득), 1,000, 1,500유로(완전 기본소득)라는 기

본소득 수준별로 상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다.

조건 없는 완전 기본소득 모델(1,000~1,500유로)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된다. 이 실험에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이러한 완전 기본소득 모델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핀란드 정부는 2년간의 실험에 2천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인데, 급여 수준이 월 1,000유로 또는 1,500유로라면 이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각각 800명과 500명 정도가 되며, 이는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에는 너무나 적다. 더구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이와 같이 매우 높은 기본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징수된 세율은 각각의 경우에 70%와 80%로 나타났다.

부분 기본소득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존의 급여 중 상당수를 통합하는 한편, 소득비례급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비례급여는 기본소득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네거티브 소득세 모델에서는 일정 소득 기준선에 미달하는 이들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며 개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전 금액이 차등적으로 감액된다. 그러나 네거티브 소득세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소득 등록자료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핀란드에서는 그러한 소득원과 관계 없이 모든 소득에 대한 최신 추적이 가능한 국가 차원의 등록 시스템 구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활용은 2019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한 네 번째 모델인 참여적 기본소득 모델은 조건부 상호성(conditional reciprocity)이 강력한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관리 감독의 문제, 즉 상호성에 의해 요구되는 참여의 특성과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누가 감독하고 요건 충족을 문서로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이 모델은 관료주의적 절차를 줄여주지도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부분적 기본소득 모델을 더 발전시키게 되었다.

■ 실험 설계와 전문가 집단이 제안한 표본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은 기본소득 제도가 실험군의 성과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산하는 데 있다. 이 실험의 중요 과제는, 유효한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 ‘기본소득 수급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면 (통제집단)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

다. 이를 위한 가장 신뢰성 높은 측정 방법이 무작위 추출법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모두 두 집단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작위 추출법과 현장실험은 핀란드의 실험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실험 방식은 지역실험(local/regional experiment)이다. 지역실험은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우선, 고객과 다양한 일선 관료체제의 접촉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예를 들면, 사회복지 및 고용사무소). 또한 지역실험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효과를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공한다.

그러나 지역실험에는 심각한 결함도 있다. 먼저 지역들은 서로 매우 이질적이며 각 지자체는 하나의 고유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험 지역과 동일시할 수 있는 통제집단으로서의 지자체를 찾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한 지역에서의 실험은 국가 전체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들도 대변하지 못한다. 게다가 하나의 지역에서 수년에 걸쳐 실시된 실험은 여러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예기치 못했던 충격적 사건(예를 들면, 주요 산업의 폐쇄)이 발생하면 실험 전체가 실패하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몇몇 실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1차 표본추출은 저강도 전국 단위 무작위 표본추출(low intensity random sampling)이어야 한다.
- 전국 단위의 실험은 지역실험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표본추출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실험 참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즉 자발적 실험의 경우, 참여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만이 실험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 두 가지 이상의 기본소득 수준을 다루어야 한다. 기본소득 모델의 역학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수준의 기본소득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둘 이상의 실험군이 실험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550, 650, 750유로의 여러 기본소득 수준과 그에 연계하여 서로 다른 정률세 수준으로 실험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 대상 인구집단은 25~63세의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계획은 근사하였고 기대는 높았으나, 곧바로 우리는 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정부안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 정부안²⁾

2016년 8월 25일, 핀란드 사회보장부는 기본소득 실험 관련 법률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였다. 정부의 법률안에 의하면, 실험은 핀란드 사회보험기구(Kela)로부터 실업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대상 집단에서, 2,000명의 실험군(기본소득 수급자)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다. 실험 참여는 의무적이다. 기본소득 수준은 월 560유로로 하며, 이 기본소득은 면세 대상으로 하여 실험 참가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실험 참가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 중 현행 세제하에서 과세 가능한 부분까지 모두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안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실험 모델이 비용 중립적이지 않으며 만일 이 모델이 핀란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면 100억~150억 유로의 적자가 발생할 것임을 의미한다.

2017~2018년 기본소득 실험 개요

- 목표 : 기본소득이 실험 참가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본소득의 기타 효과를 조사함.
- 기본소득 수준 : 월 560유로로 면세. 임시직 및 파트타임직 취업을 독려하는 적정 수준의 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대상 집단 : 25~58세 연령대의 핀란드 거주자로, 2016년 11월 현재 실업보호법에 의해 기본 일일수당 또는 노동시장 보조금 수급자

2) 실험을 요약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watch?v=8xPAIEkT0kk&feature=youtu.be> 참조.

이하에서는 그렇게 공들여 설계된 실험이 무효화된 이유와 실제로 채택된 실험 모델이 예비 보고서에서 기술된 설계와 상이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형편 없는 모델을 실험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기를 바란다.³⁾ 첫 번째 이유는 국내외 법규와 관련이 있다.

■ 법적 제약에 따른 절충 필요성⁴⁾

이 실험은 의회의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많은 법적 제약이 따랐다. 핀란드 의회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mmittee of the Finnish Parliament)에 의하면, 실험 관련 입법의 주요 요건으로서, 실험은 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목적은 기본권 관점에서 용인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이어야 하며, 실험을 위해 선정된 영역들이 그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한된 기간 내에 실험이 실시되어야 하며, (실험군, 통제군 및 기타 인구집단 간) 불평등한 처우는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러한 불평등 처우는 바람직한 동기에 의한 것으로 증거 기반 정책 입안을 위해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생성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명확하게 정의되며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실험 관련 법규는 항상 특정 기간을 정하고 있다. 실험 기간은 너무 짧아서도 안 되지만, 헌법위원회는 일부 실험들이 5~8년에 걸쳐 진행되는 등 실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비판해 왔다.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법의 차원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경우에 시급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하기도 한) 문제들은 이 급여의 통합, 배제 및 이전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정의는 물에 그어진 선과 같이 분명하지 않다. 즉 기본소득이 단순히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인지 아니면 기여 기반(contributory-based)(보험 기반 또는 근로 연계)의 성격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첫 번

3) <http://blogi.kansanelakelaitos.fi/arkisto/3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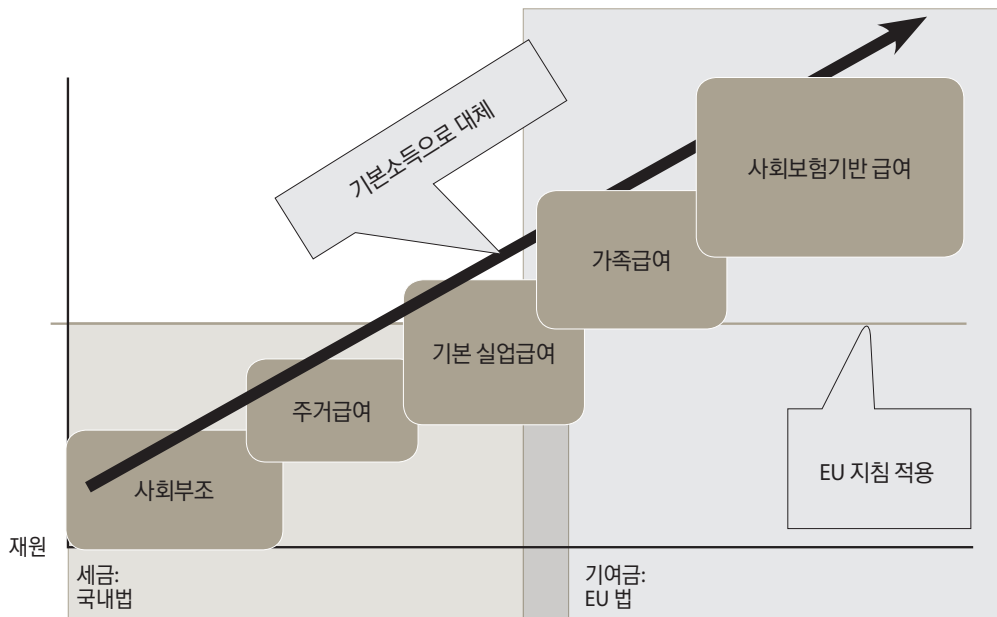
4) 이 장의 상당 부분은 Kalliomaa-Puha, Tuovinen & Kangas(2016), “Basic income experiment in Finland”, *Journal of Social Security Legislation* 2에서 발췌함.

째의 경우에는 외국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처럼 '분명한' 두 가지 경우의 사이에는 그 상태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회색지대의 급여들이 존재한다. [그림 1]은 다양한 유형의 기본소득 모델들과 EU 법 규제 강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EU 법의 경우,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사회부조와 주거급여는 'EU 사회보장조정규정 (EU social security coordination regulation(883/2004))'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는 사회부조와 주거급여가 자국 외로 이전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들을 단순히 대체하기만 할 기본소득이라면 국외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근로 이력이 없고 보험 기반 급여의 수혜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수준의 요양급여 및 실업급여는 그다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서 국외 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산 기반 급여(resource-based benefits)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의해 대체되는 급여들의 경우에는, 명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해당 급여는 수급자가 외국으로 이주 시에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실험 모델들은 제도의 지급 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도 한다. 대체로 월 490~600 유로의 기본소득은 국외 이전이 가능하지 않다. 반면 그보다 높은 금액인 경우(월 기본소득

[그림 1]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과 EU 법 규제의 강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상의 도표



1,000~1,500유로)는 [그림 1]에서 우측 상단에 위치하며, 따라서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

기본소득 모델이 핀란드나 기타 EU 회원국에서 시행된다면 EU 법령은 분명 해당 모델에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 모델이 수혜 자격을 자국의 시민으로 한정한다면 결과적으로 EU의 차별금지법령을 위반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EU 규정들이 기본소득에 적용 가능한지 아닌지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핀란드나 기타 EU 회원국에서 기본소득 모델이 시행된다면 EU 전체의 문제가 된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EU 사법재판소가 기본소득의 특성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예견하기는 힘들다.

■ 초기 계획이 무효화된 기타 주요 원인

기본소득 실험의 예산은 2천만 유로로 책정되었고, 이는 급여 지급액(실험군에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제반 행정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정부는 예산 증액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6개월이라는 짧은 사전 통지기간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 외 추가적인 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세법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제 변경은 불가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본소득 모델은 기존의 세제를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했으며 과세율은 당초 비용 중립적인 모델에 필요했던 수준인 40~45%보다 낮아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진은 예비 보고서에서 여러 비용 중립적 세제 모델을 제안하였으나, 기술적 실행이나 필요한 입법 절차의 측면에서 그러한 모델을 2017년 1월 1일까지 완성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정부는 실험 개시 시기를 2018년으로 미루는 것을 원치 않았고, 실험이 2017년 초에 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매우 서둘러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헌법적인 이유로, 여러 다른 수준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은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헌법에 따라 모든 개인은 그렇지 않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실험은 핀란드 역사상 유례가 없다. 따라서 대상 집단이 현재 누리고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에 상응하는 기본소득 수준 한 가지로만 실험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표준추출편의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분명히 이 실험이 지닌

장점이다.

그런데 왜 2,000명의 실업자를 실험군으로 하였을까? 2,000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현재 핀란드 사회보험기구(Kela)의 복지급여 수급자인 이들이 비용효율적인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모델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핀란드 사회보험기구가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기반으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람들과 사회적 상황보다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덜 복잡하다. 실험군이 이보다 더 이질이었다면, 이 연구 모델을 다양한 여러 근로, 가족 및 사회정책 상황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복잡한 제도적 환경에 하나의 단순한 모델을 삽입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시간 제약도 대상 인구집단과 연구 모델의 선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끝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실험군으로 선택하는 방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표본 추출이 가능하리라는 점에서 지지를 받았다. 핀란드 사회보험기구(Kela)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수급자 등록자료 덕분에 실업급여 수급자 표본을 추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상 집단이 예비 보고서에서 설계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었다면, 과세 자료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해야 할 것이며, 이 작업에 최대 2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추출된 표본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셈이 된다. 게다가 핀란드 사회보험기구(Kela) 등록자료를 이용하면 실업자라는 동일한 통제집단을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실험군과 통제군을 정하여, 근로소득, 실업급여 및 기타 핀란드 사회보험기구(Kela) 기반 급여(주거급여, 질병급여, 사회부조, 재할, 의료 검진, 처방 약품 이용 등)에 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핀란드 사회보험기구(Kela) 등록자료를 통해 이 두 집단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로 인해 우리는 과학적인 환경에서 기본소득의 잠재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델을 통해 금전적 인센티브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60유로는 완벽하게 조건 없이 지급되며,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560유로를 모두 더한 금액을 소득으로 얻게 된다. 따라서 현행 체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상실할까 우려하여 단기 일자리나 저임금 일자리 취업을 거부하지만 실험 모델하에서

는 이러한 일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 실험은 2018년에 종료된 후 2019년에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실험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등록자료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국가의 연구자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필자는 이 실험이 시범 연구가 되어 이후에는 기타 집단들(저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고 예비 보고서에 기술된 더 발전된 세제 모델을 시험해볼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실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⁵⁾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물론 훨씬 더 많은 예산과 함께, 과세 행정당국의 세법 개정안 수립 참여, 비교적 큰 규모의 실험군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핀란드 사회보험기구(Kela)의 전산 지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측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며, 안타깝게도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KELI**

5) <http://blogi.kansanelakelaitos.fi/arkisto/3648>